

성균관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제시문 1>~<제시문 5>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관료제란 전문 지식을 배우고 체계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중요한 정치경제 기구를 장악하여 지배하는 통치 체계(governance system)를 말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관료제는 폐쇄적 네트워크에 머물게 되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관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관료제의 폐쇄성은 나만 생존하면 된다는 부서 이기주의로 표출되기 십상이며, 정해진 매뉴얼에만 갇히다 보면 조직 내에 타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토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두려움 없는 비판,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정치체제가 절실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시문 2>

말에는 힘이 담겨있다. 보이지 않는 말의 힘에 사람들은 상처 입고 치유 받으며 살아간다. 말은 개인의 사고에 의해 선택된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종교·성 등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자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올바름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동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찬성과 반대 측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으며 사소한 단어마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가며 써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다양한 개인이 모인 단체에서 그 기준을 통일하기는 힘들며 한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내세우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어생활에서부터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시문 3>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의할 때 용인될 수 없다.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의견 표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의견 표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거나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라고 모욕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어느 표현이 과격하고 저열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존감을 침해할 경우에만 처벌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말은 초등학생 같은 소리이다’라는 표현도 교수가 학생을 향해 사용한다면 모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교수에게 사용한다면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표현의 가벌성(可罰性)이 달라진다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침해가 생길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법원이 한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단하는 것 자체가 행복 추구권의 핵심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

<제시문 4>

어떤 사람의 판단이 진실로 믿음직하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옳은 의견 못지않게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치고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 인간 지성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옳지 않은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시문 5>

현대 국가는 시민들 사이의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는 상당 부분 줄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인간 행위의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단순히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 예컨대 친구에게 “내 생일 파티에 올래?”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화자의 언표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실 욕설이나 폭언은 언어를 통해 행해지지만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또 다른 폭력이기도하다. 그래서 욕설이나 폭언은 언어폭력이 되는 것이다. 협박이나 위협 역시 언어행위로 이루어진다. 짐승의 싸움과는 달리 오늘날 인간의 싸움은 완력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야만적인 것은 아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제시문 1>~<제시문 5>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독해]

(제시문 1) 자유로운 소통(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야 관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

(제시문 3) 모욕을 규제하면(표현을 제한하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제시문 4) 이전에 주목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지혜를 높일 수 있다.

(제시문 2)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불평등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

(제시문 5) 언어도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와 같이 폭력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791자

문단	기능	내용
1	화제&쟁점	제시문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장 A	먼저 자유 제한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는 제시문 (1), (3), (4)가 있고,
	입장 B	긍정적 입장으로는 제시문 (2), (5)가 있다.
2	주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다양한 차원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논거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관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증거	제시문 (1)에서 나오듯,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폐쇄적인 관료제가 갖는 비민주성, 창의성 부재 등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거	다음으로 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비민주성은 물론, 부당한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거	제시문 (3)에서 나타나듯, 모욕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여 부당한 판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논거	마지막으로 지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개인 및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증거	제시문 (4)가 말하듯, 타인의 이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장	반면,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제시된다.
	논거	먼저 실제적 차원에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부당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증거	제시문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가려서 해야 부도덕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논거	또한 개념적 차원에서도 언어 표현이 갖는 행위적 특성으로 인해 규제는 필요하다.
	증거	제시문 (5)에서 말하듯, 언어적 표현 역시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야만적 언어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1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표현의 자유’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규제, 온라인상의 모욕이나 비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대중 매체들에 등장한 기고문 등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층위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문제 1] : 30점, [문제 2] : 40점, [문제 3] : 30점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30점	② B 등급: 24점	③ C 등급: 18점
④ D 등급: 12점	⑤ E 등급: 6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지침]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4>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제시문 2>와 <제시문 5>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 1>은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성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정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3>은 무엇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정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므로, 모욕을 이유로 표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4>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이한 의견과 시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정치적 차원과 지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 생겨나는 효용을 강조함으로써, <제시문 3>은 법적 차원에서, 특히 모욕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2>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갖는 부작용을 인정하지만, 인종·민족·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을 배제해야 할 필요에 따라 의사표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달리 말해 언어생활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제시문 5>는 인간의 말하기를 하나의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한다. 현대 국가가 물리적 폭력 행사를 규제하듯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입장이다. 따라서 욕설이나 폭언 등 심리적 공격 수단이 되는 표현들을 국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 2>는 차별과 편견 제거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시문 5>는 인간의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물리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가 목적이나 결과

를 강조하면서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결과도 언급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점의 변화를 통해 표현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채점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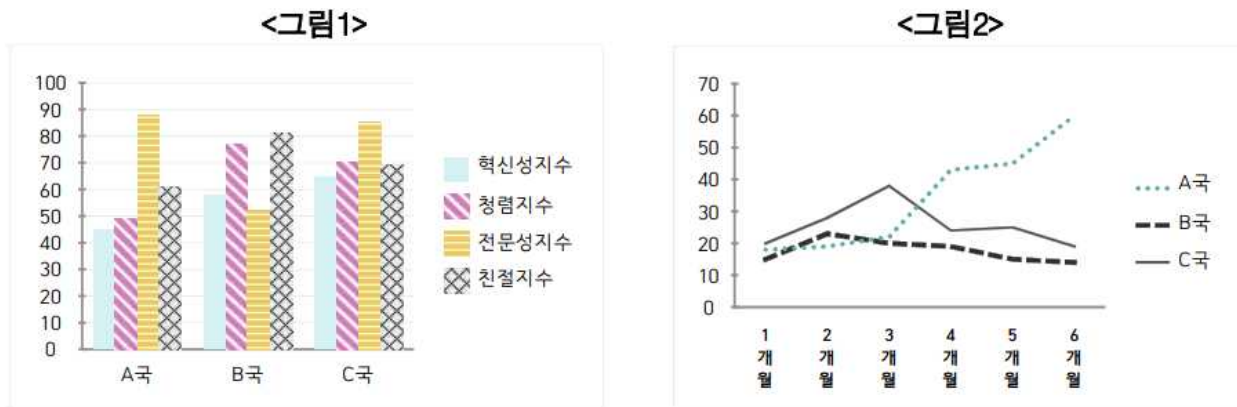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차이점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성균관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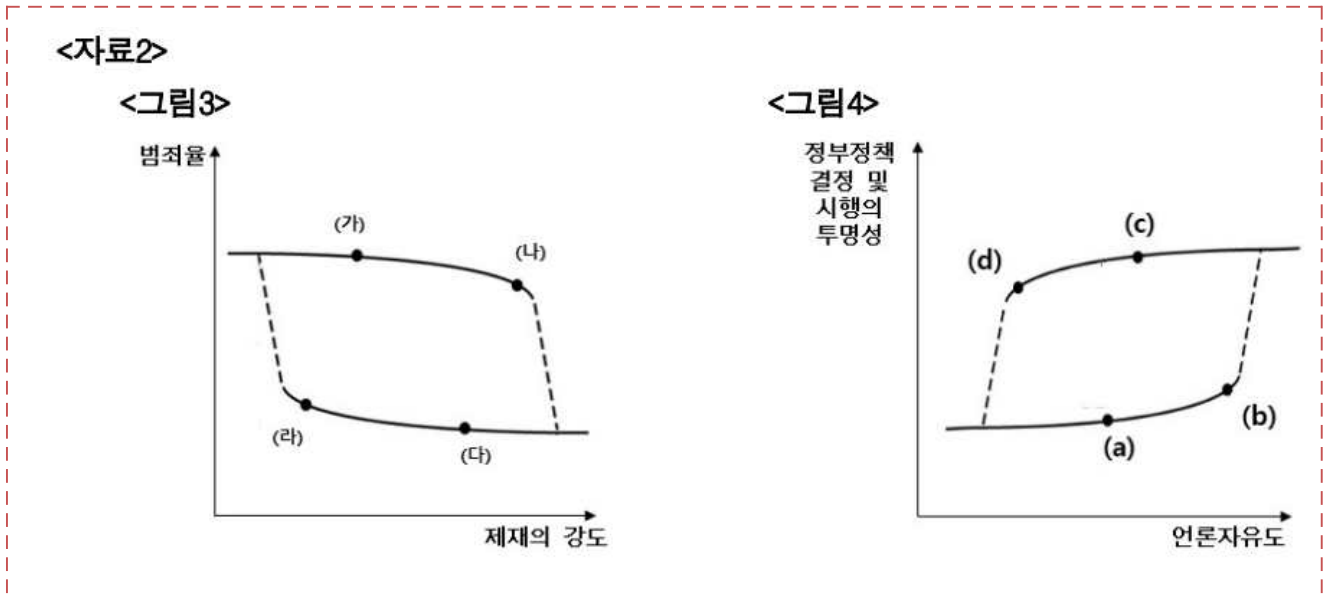
- (1) <자료 1>에서 <그림 1>은 국제언론자유협약 체결 직전 A, B, C 세 국가의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림 2>는 협약 체결 직후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B, C 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료 1>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 (세 국가의 공무원 수 및 나머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20점)

<자료1>



* y축은 비리 적발건수를 표시함

(2) <자료 2>에서 <그림 3>과 <해설>을 참고하여 <그림 4>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십시오. (20점)



<해설>

<그림 3>에서 위쪽 실선은 범죄율이 높은 사회의 범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아래쪽 실선은 범죄율이 낮은 사회의 범죄율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범죄율이 높은 사회의 경우 점 (가)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더 커져도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제재의 강도가 (나) 지점을 지날 정도로 강화되면 비로소 그림의 점선처럼 급격히 감소하여 범죄율이 낮은 사회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범죄율이 낮은 사회는 점 (다) 처럼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경우 제재 강도가 웬만큼 감소하여도 범죄율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그치다가 (라) 지점을 지나게 되면 그림의 점선처럼 급격하게 상승하여 범죄율이 높은 사회로 전환된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1) <자료 1>에서 <그림 1>은 국제언론자유협약 체결 직전 A, B, C 세 국가의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그림 2>는 협약 체결 직후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를 B, C 국가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료 1>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밝히시오. (세 국가의 공무원 수 및 나머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20점)

[독해]

(그림1) A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청렴지수가 낮다. → 비리가 많은 국가이다.

(그림2) 부패한 A국의 비리가 언론자유협약 초기에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 원래는 언론 자유화 정도 낮았다. 언론자유협약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A국의 비리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 언론 자유화의 청렴 강화 기능

[논리평면] 견해 & [예시답안] 458자

문단	기능	내용
1	화제+주장	A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언론 자유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준 핵심	다른 나라들이 비해 청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자유화 도입 초기에는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그림1>을 보면, A국의 청렴지수는 다른 국가들보다 20%p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자유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청렴한 C국보다 비리 적발 건수가 낮다.
	적용	이는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가 낮아서 비리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장	이러한 상황들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준 핵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회적 부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자유협약이 체결된 후 A국의 비리가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적용	이처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자료 2>에서 <그림 3>과 <해설>을 참고하여 <그림 4>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십시오. (20점)

[독해]

(그림3) & (해설)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경향적 차원에서 통제는 범죄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4) (위와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언론자유도는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견해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해설)	통제의 강도	범죄율에 영향
	(자료3)	통제가 낮아지면	(라) 이하에서의 범죄율 상승
		통제가 높아지면	(나) 이상에서의 범죄율 하락
대상	(그림4)	언론자유도	정부정책 투명성에 영향

[예시답안] 647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사회적 악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궁극적 차원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기준 상술1	범죄율이 낮은 국가이든, 그렇지 않은 국가이든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이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큰 폭으로 범죄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준 상술2	이는 (그림3)에서 볼 수 있는데, 범죄율이 낮은 사회에서 통제의 강도가 낮아지면 초기에는 범죄율에 큰 움직임이 없다가 (라) 지점 이하로 통제가 낮아지면 범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범죄율이 높은 사회에서도 범죄에 대한 통제를 서서히 높일 때에는 범죄율에 큰 변화가 없다가, 통제 수준이 (나) 지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범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2	주장	이와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언론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상	(그림4)를 보면,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언론자유도는 (그림3)의 범죄율과 통제 강도의 관계와 동일한 형상을 보인다.
	적용	따라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면 궁극적 차원에서 정부의 투명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가 낮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투명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3	주장	이를 토대로 볼 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적용	표현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높아지게 되면 궁극적 차원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1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표현의 자유’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규제, 온라인상의 모욕이나 비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2]의 <자료>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로운 언론이 수행하는 감시기능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문제 1]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③ 표현력 및 어법: 15%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문제 1] : 30점, [문제 2] : 40점, [문제 3] : 30점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40점	② B 등급: 32점	③ C 등급: 24점
④ D 등급: 16점	⑤ E 등급: 8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지침]

[문제 2]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제의 공통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시된 두 개의 자료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한다. 둘째, 해석 결과를 [문제 1]의 한 입장의 옹호와 관련시켜야 한다. 차이점도 두 가지이다. 첫째, (1)은 두 자료를 각각 해석한 다음,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지만, (2)에서는 한 자료를 자료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다른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둘째, (1)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설명하면 되지만, (2)는 실제 옹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체험해 보도록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였다.

문제 (1)은 자료를 해석하여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자유화 정도를 추론해보라는 (요구 1)과 추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옹호하는지 판단하라는 (요구 2)로 이루어진다.

(요구 1)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1>과 <그림 2> 각각을 해석하고 둘을 연결할 수 있는 가설을 추론해야 한다. <그림 1>에는 체결 직전 공무원의 직무수행평가는 나와 있지만 언론자유화 정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림 2>는 체결 이후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만 체결 직전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림 2>가 나타내는 비리 적발건수는 <그림 1>에 나타난 지수 중 청렴지수와 관련된다. 청렴도가 높으면 적발건수가 낮고, 청렴도가 낮으면 적발건수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청렴지수는 A국이 B, C국에 비해 상당히 낮는데, <그림 2>를 보면 언론자유화제도 시행 초기 세 나라의 적발건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미세하게 보면 심지어 청렴지수는 C국이 더 높는데 적발건수는 A국이 더 낮다. 이렇게 청렴지수가 낮은 A국이 청렴지수가 그보다 높은 두 나라와 적발건수에서 유사하다는 점으로부터, 체결 직전 A국에서는 비리가 발각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었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설은 <그림 2>에 의해 입증된다.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 이후 A국의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은폐된 비리가 많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B, C 국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발건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곧 하향세로 전환하여 초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 두 나라가 출발 당시부터 청렴도가 높아 은폐된 비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언론자유화 제도 시행으로 빚어진 결과로, 달리 말해 자유롭게 감시, 고발,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은폐된 비리가 폭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B, C국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언론의 감시 기능이 상당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은폐된 비리가 적었지만, A국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체결 직전에는 많은 비리가 은폐되어 있다가 제도 시행 이후 언론자유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고발, 폭로되어 적발건수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체결 직전 A국의 언론 자유화 정도는 B, C국에 비해서 낮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2)와 관련해서 <자료 1>은 [문제 1]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언론자유화가 시행된다는 것은 [제시문 1]이 말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두려움 없는 비판”이 자유롭게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경우 제도 시행 후 6개월 뒤까지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렴도의 증가 자체를 직

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B, C 국에서 언론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적발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가 단기간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B, C국에서는 은폐된 비리건수가 많지 않았기에 언론자유화의 효용이 단기간에 검증된 것이므로 A국에서도 언론자유화의 효용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낮은 수준의 적발건수에 다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언론자유화가 정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언론자유화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할 것이고,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문제 1]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게 된다.

정리해보면 문제 (1)에서는 학생이 청렴도와 비리 적발건수의 관계를 이해하여 체결 직전 세 국가의 청렴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유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 가설을 <그림 2>를 통하여 유의미하게 검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된 결과가 [제시문 1]의 한 입장과 갖는 논리적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지가 채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문제 (2)는 <그림 3>과 <해설>을 통해 자료해석 방법을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그림 4>를 해석하라는 (요구 3)과 이 자료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자료를 활용한 옹호논리를 직접 제시하라는 (요구 4)로 이루어진다.

(요구 3)에 따라 <그림 4>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정부정책 결정 및 시행의 투명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 (a) 지점 전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강화되어도 투명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완만한 변화만 나타내다가 (b) 지점을 통과할 정도로 강화되면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여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급격히 변하게 된다. 반대로 투명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c) 지점 전후에서는 언론의 자유도가 웬만큼 약화되어도 투명성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데 그치다가 (d) 지점을 지날 정도로 약화되면 그때서야 급격히 변화하여 투명성이 낮은 사회로 바뀌게 된다.

결국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면서 현재 투명성이 낮은 사회와 높은 사회가 언론자유도에 반응하는 변화의 지점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구 4)와 관련해서는 이 점을 활용하여, 달리 말해 <그림 4>의 위쪽 선과 아래쪽 선 모두를 활용하여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논의의 방향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문제 1]의 입장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기에 적절하다.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인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면 투명성이 낮은 나라도 투명성이 높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며, 한번 투명성이 높은 나라가 되면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투명성이 낮은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효용성을 근거로 이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a) 지점 전후와 (c) 지점 전후만을 활용할 경우 [문제 1]의 입장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옹호할 수 있다. 이 지점들에서는 언론자유도의 증감이 투명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이 높은 사회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어도 투명성에 큰 하락이 없으므로 편견, 차별, 언어폭력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비교적 쉽게 성립할 수 있다. 언론 자유의 적절한 제한이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투명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에도 언론 자유의 제한을 옹호하는 논리를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편견과 차별 배제, 언어폭력 방지 등이 정부의 투명성 확보보다 왜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가 정당화되어야 투명성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언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 채점등급]

- A :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4개의 요구사항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한 답안.
- B : 4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긴 했으나 부분적으로 서술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에 아쉬움이 있는 답안.
- C : 3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1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D : 2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2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E : 1개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충분한 서술을 통해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3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답안.
- F : 요구사항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답안.

성균관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3번

☞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30점)

<보기>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 <보기>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30점)

[독해]

<보기> 인터넷 댓글 실명제: 피해에 대한 가해자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제시문 1) 자유로운 소통(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야 관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

(제시문 3) 모욕을 규제하면(표현을 제한하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제시문 4) 이견에 주목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지혜를 높일 수 있다.

(제시문 2)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불평등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

(제시문 5) 언어도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와 같이 폭력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1	자유로운 소통	관료제의 부작용 극복	G
대상	실명제	소통의 자유도 약화	관료제 부작용 지속	b
기준	3	표현의 제한(모욕 규제)	민주주의 역행, 부당 피해 발생	B
대상	실명제	표현 제한	민주주의 역행, 부당 피해 발생	b
기준	4	이견에 주목해야	신뢰와 지혜 상승	G
대상	실명제	다른 의견 출현 빈도 감소	주장의 신뢰도 하락과 집단 지혜 하락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2	올바른 언어 사용	불평등 차별 개선	G
대상	실명제	정제된 언어 사용	불평등 차별 개선	g
기준	5	언어 = 행위	폭력 규제	G
대상	실명제	인터넷 댓글 = 행위	폭력적 댓글 규제	g

[예시답안] 1019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핵심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대상-상술	이러한 제도가 갖는 건전한 효력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2	찬성 주장	먼저,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 핵심	올바른 언어 사용 정착으로 인해 불평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2)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해야 차별을 줄일 수 있다..
	적용	이처럼 인터넷에서 올바르지 못한 표현들이 규제된다면 그동안 댓글로 가해졌던 차별의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기준 핵심	또한 찬성 측에서는 언어 역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준 상술	제시문 (5)에 제시되듯, 언어 또한 폭력적 결과를 낼 수 있는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폭력적 언사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적용	이와 같이 폭력적 댓글 또한 폭력적 행위와 유사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반대 주장	반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기준 핵심	소통의 자유가 제한되면 관료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1)이 말하듯,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은 폐쇄적 관료제의 비민주성과 창의성 부재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적용	따라서 인터넷에서도 자유로운 견해 제시가 가능해야 민주적이고도 창의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기준 핵심	또한 표현에 대한 규제가 민주성 저해는 물론, 부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준 상술	제시문 (3)에 나오듯, 모욕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부당한 판결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이처럼 인터넷 댓글에 대한 규제 역시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준 핵심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에 주목할 줄 알아야 개인적,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기준 상술	제시문 (4)가 말하듯, 이견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이 사회적으로도 지혜에 이르는 길이 된다.	
적용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신뢰와 지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모의 논술 개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1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

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정치적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표현의 자유’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그에 대한 규제, 온라인상의 모욕이나 비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3]의 <보기>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12년 판결을 원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찬반 논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적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 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항별 배점

[문제 1] : 30점, [문제 2] : 40점, [문제 3] : 30점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30점	② B 등급: 24점	③ C 등급: 18점
④ D 등급: 12점	⑤ E 등급: 6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지침]

[문제 3]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한

여 [문제 1]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각각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이론적 입장을 구체적 사례에 응용하고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댓글 실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의사 표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익명성이 자칫 오용, 남용되어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댓글 실명제에 의한 익명성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 제거는 개인들의 의사 표현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편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측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타 구성원의 권리나 다른 사회적 이익을 위해 때로 이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 측에게는 댓글 실명제가 실익이 명백하고 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넘어설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다.

가장 훌륭한 답안은 댓글 실명제의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지문에 등장하는 두 입장의 근본 취지를 밝힌 후 찬반의 논리를 전개하는 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생 수준의 예시 답안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대학 예시답안 1/2 - 댓글 실명제에 찬성하는 견해] 904자

일반적인 면대면 혹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서적 등의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경우와 비교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표명과 교환에는 상당한 익명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익명성을 방패막이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거나 판단을 오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제한함으로써 의사 표현에 책임성을 높이려는 ‘댓글 실명제’는 긍정적이다.

물론 익명성의 제한이 의사 표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칫 간접적으로나마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개인과 사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의 <제시문 2>에서 논의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고 구성원 간의 조화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갖는 호소력은 이러한 제한의 필요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적잖이 동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시문 5>에서 보여주듯 우리의 말은 때로 물리적 폭력을 능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들의 폭력사용을 규제하듯 때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경우가 있다. 비록 ‘댓글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어느 정도 위축이 예상되더라도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예시답안 2/2 - 댓글 실명제에 반대하는 견해] 940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표명과 교환에는 상당한 익명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를 오용하여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사회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 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익명성의 제한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댓글 실명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

익명성의 제한은 의사 표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간접적으로나마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의사 표현의 위축이나 자유의 제한은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중대한 손해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이며 현대 사회는 이로부터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문제 1]의 <제시문 3>에서 밝히듯이 시민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의 향유와 행복추구가 중대하게 방해받게 된다. 사회 차원에서 보면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제시문 1>이 지적하듯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료조직을 비롯한 국가기구 전반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핵심수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시문 4>가 설명하듯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거나 차단된다면 결국 한 사회는 여러 사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편협한 시각과 결정에 의해 지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비록 ‘댓글 실명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초래될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학 채점등급]

- A : ‘댓글실명제’의 핵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두 입장 및 제시문의 주요논지를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답안.
- B : ‘댓글실명제’의 핵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했으나, 논리의 구체성이 결핍된 답안.
- C : ‘댓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지만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논술한 답안.
- D : ‘댓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으며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했으나, 논리의 구체성이 결핍된 답안.
- E : ‘댓글실명제’의 취지를 부정확 혹은 불분명하게 이해하였으며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